

“당원 주권 정당” 정청래·박찬대, ‘당심 잡기’ 총력전

민주, 오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지방선거에 당원 참여 공간 마련”
정 “지구당 부활·운영 시스템 개선”
박, 전남 방문 “당원 공천 직접 참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공식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9일 ‘당원주권 정당’을 내걸며 ‘당심 잡기’에 주력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표심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 열린 ‘당원 주권정당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강한 정당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고 가장 민주적인 정당은 당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다. 그런데 우리당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박찬대 의원은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계속되고 있다”며 정당 운영 시스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정 의원은 “10여년 전 당헌·당규라면 당 대표 출마를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면서



도 “(선거 규칙을) 권리당원 50%·중앙위원 50%로 개정해야 한다고 10년 넘게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바로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의원 오더가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당원이 주인 역할을 하는 당헌·당규로 개정돼 가고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공정한 경선 기회의 장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정당 조직인 지구당 제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활돼야 한다. 지역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비용도 합법적으로 총당할 수 있는 후원 제도 마련도 너무나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 중인 박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공천에 당원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당원 주권’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로 당원주권 시대를 위해 노력했다. 경선 개혁으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며 당선 즉시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켜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대해, “내란 종식의 종합적 법적 장치”라고 소개하며 “윤석열 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열어 국민과 함께 완전한 내란 종식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지도가 의원들 사이에서 크고 당원들 사이에선 정 의원에 밀린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제가)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에서 의원과 당원의 마음은 구분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당원 경선으로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당원 마음을 수용한 의원이 선출됐다”며 “의원과의 당원이 겨루거나 싸운다는 건 과거 현상이자 문법이다. 잘못된 진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10일 후보 등록 마감 후 내달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

차관급 내부 승진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전북 부안)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선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우선 김영수 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숙성이 있다”며 “빈

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1차장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국가 첨단사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 종교계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에 참석한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의장 주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혁신위원장 윤희숙·전대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국민의힘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며 “당이 겪는 모든 갈등과 혼란이 향후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장 배석 제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與 “흠집내기”·野 “범죄 종합세트”… 청문정국 공방

민주, 1기 내각 조속 완성 주력
‘교육’ 이진숙 옹호, 일각선 우려
국힘, 낙마기준·국민검증단 발족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적인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인 만큼, 내각이 조속히 완성되는 것이 민생 회복의 시작이라며 후보자 전원 통과를 목표로 엄호 사격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1기 후보자들을 겨냥해 ‘범죄 종합선물세트’라며 철저한 검증에 예고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후보자들에 대해 흠집내기 하고 낙마시키려 하겠지만 당과 싸움 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의혹이 있으니 본인이 소명하라’ 식으로 공세를 벌이니 인재난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야권의 낙마 공세가 집중되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과 관

련, “표절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학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선 청문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과·소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당은 일단 이 후보자가 남성 위주인 내각에 여성이자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 출신이라는 상징성도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주의’ 기조에 따라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어 염려가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론을 주시하는 동향도 감지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진숙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딸 조기유학 논란 등을 부각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낙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의 논문은 표절이 (절)반으로, 묵묵히 연구하는 교수와 학생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논문을 표절한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총남대에 정식 조사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금 탈루나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 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사·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해 충돌 가능성 등 낙마 기준 7개 항목을 제시하며 여론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드러난 비리·불법 의혹만으로도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겼다”며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석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등 후보자 면면을 살펴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종합선물세트’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공식 후보자에 대한 ‘국민 검증단’도 띄운 데 이어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